



미국 : JP모건체이스 은행, 워싱턴 지역의 최저임금 18달러로 인상

2018년 11월 13일, JP모건체이스 은행은 워싱턴 D.C. 지역에 신규 지점을 개설하고 채용된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 지불할 것을 약속했다. 은행의 중부 대서양 지역 회장 피터 셰르(Peter Scher)는 워싱턴 D.C. 인근 지역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13.25달러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제공하여 더 수준 높은 인력을 채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입 직원의 40%가 나중에 회사 내에서 일정 수준의 승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먼저 체이스 은행은 지난 2년간 공화당이 통제하는 의회와 행정부가 후원하는 규제 완화와 절감된 세액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특히나 체이스 은행은 2018년 상반기에 이미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5개년 투자계획의 일부로 워싱턴 D.C. 지역에 70개의 지점을 새로 개설하고 약

700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¹⁾ 이는 일견 체이스가 전체적으로 고용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여왔던 것과는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체이스의 사업전략은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지점 수를 늘리되 지나치게 가깝게 배치된 지점들은 통폐합하고 지점당 직원 수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다.²⁾

이는 실제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최저임금이 법적인 수준에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주들의 사업전략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전략이 최저임금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겠으나 수익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에서 지점 수 및 직원들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는 지역 간 임금불평등을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여 볼 수 있다.

1) Chase Media Center News(2018.4.19), "JPMorgan Chase Announces First Major Branch Expansion in Greater Washington," <https://media.chase.com/news/jpmorgan-chase-announces-first-major-branch-expansion-in-greater>

2) The Washington Post(2018.11.18), "JPMorgan Chase commits to \$18 minimum wage in D.C." Retrieved on November 19th, 2018,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economy/jpmorgan-chase-commits-to-18-minimum-wage-in-dc/2018/11/18/73e1ae18-e8ed-11e8-b8dc-66cca409c180_story.html?utm_term=.21f80a8144f2



미국 : 매리어트 호텔 노동자들, 46일간의 파업으로 근로조건 향상

2018년 11월 17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의 매리어트(Marriott) 호텔 노동자들은 46일간의 파업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10월 3일 약 1,500명의 노동자들은 현재의 근로조건하에서는 보스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에서도 일해야만 하며, 이는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주장하며 파업을 시작하였다. 호텔, 카지노, 요식업, 창고, 세탁업 중심의 노조 유나이티드 히어(Unite Here)의 보스턴 지부인 26지부(Local 26)는 매리어트 호텔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파업을 조직하였다. 결과적으로 매리어트와 노조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합의하였고, 이는 노동자들의 투표(찬성 677, 반대 9)를 통해 승인되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 및 부가혜택(benefits package) 등에서도 많은 향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례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이번 파업이 정부 조직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노조가 보스턴 시의 시장인 마티 월쉬(Marty Walsh, 민주당 소속)와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인 찰리 베이커(Charlie Baker, 공화당 소속)로부터 공개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보스턴 시 의회는 모든 시 공무원들이 파업기간에 매리어트 호텔을 이용할 것을 금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샌프란시스코나 하와이 지역의 매리어트 호텔에서도 파업이 진행 중인데, 보스턴의 성공적인 사례는 다른 지역들의 노동조건 협상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¹⁾

1) NECN(2018.11.17), "Agreement Reached Between Marriott and Union, Ending Historic Strike," Retrieved on November 19th, 2018, <https://www.necn.com/news/new-england/Tentative-Agreement-Reached-Between-Marriott-Unite-Here-26-Union-500751531.html>

유럽인권법원 : 파업참가 철도기관사 해고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

2018년 11월 20일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법원')은 러시아의 한 철도회사가 파업에 참가한 철도기관사(원고)를 징계해고하고, 러시아 국내 법원이 아무런 법

익형량(balancing exercise) 심사 없이 러시아의 철도법(Railway Acts of 1995 and 2003)을 근거로 원고의 형식적 법률 준수 여부만을 판단해 당해 해고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비례성을 일탈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11조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¹⁾

이 판결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인권법원이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제 11조 규정에서 해석을 통해 파업권(right to strike)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인권법원은 먼저 파업권 관련 국제법 문서와 국제기구의 관행을 검토해, 예외가 인정되는 군·경찰 조직과 달리 철도운송산업은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는 핵심업무(essential servic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이러한 관행에 반해 협약 해당 조항을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설령 핵심업무에 해당해 파업권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안과 같은 전면적 금지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강한 논거를 요구

하는데, 러시아 정부가 제시한 파업 시 예상되는 금전적 손실 액수는 그러한 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이어 인권법원은 러시아의 철도산업 근로자 파업권의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관련 법령의 입법과정에서 해당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가 있었는지 살폈다. 이를테면 알선, 중재와 같이 전면적 파업권 행사 금지에 대한 대안적 조치가 검토되었는지 조사했으나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권법원은 파업에 참여한 사건 원고를 해고하고 국내법원이 이 해고를 적법하다고 결정한 것은 비례적이지 못할 뿐더러,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들의 노동조합에 ‘냉각효과(chilling effect)’를 끼쳐 인권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1)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gnevenko v Russia, Application no. 44873-09, 20 November 2018.

스웨덴 : 외국 출신 창업가들, 스웨덴 출신에 비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 겪어

스웨덴 경제지역발전국(Tillväxtverket)이 발표한 보고서¹⁾에 따르면, 외국에서 온 창업가가 스웨덴 출신에 비해 스웨덴에서 창업 대출을 받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 수익 창출의 정도, 산업형태, 창업가의 연령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외국 출

신 창업가가 스웨덴 출신에 비해서 창업 및 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경제지역발전국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창업가 중 12%에 해당하는 이들은 자국민에게 우호적인 자금마련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차후 경제성장에 있어 장애물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다수의 외국 출신 창업가들, 특히 젊은 외국 출신 창업가들은 대출을 비롯한 현재의 자금마련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지역발전국의 코린 읍만 헬미넨(Corinne Uppman Helminen) 씨는 창업가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간의 관계 형성이 창업가의 자금 마련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창업가의 출신에 따른 언어, 문화, 경영방식 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은행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

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데 있어서는 창업가의 배경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지역발전국은 10,0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사회 내 권력구조, 위계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이를 창업을 비롯한 경영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1) Tillväxtverket(2018), "Svårare att få lån för företagare med utländsk bakgrund," <https://tillvaxtverket.se/statistik/vara-undersokningar/resultat-fovven-2017/2018-11-12-svarare-att-fa-lan--for-foretagare-med-utlandsk-bakgrund.html>

영국 : 블랙프라이데이 주간, 물류·유통·배송업체 노사갈등 심화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이 예상되는 2018년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앞두고 관련 업체의 노사관계가 진통을 겪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일반노동조합 중 하나인 GMB는 국내 여러 지역에서 물류센터·창고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회사의 '비인간적인 근로조건과 위험한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¹⁾ 블랙프라이데이 특수를 맞아 최근 2만 명의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한 아마존도 해당 업체 중 하나이다. 아마존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아마존의 산업재해율은 업계 평균에 비해 40% 낮다고 반박했다.²⁾

한편 GMB는 이러한 물류·유통업체로부터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회사 소속 택배기사의 파

업도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11월 24일과 25일 예정된 배송회사 DPD 소속 택배기사들의 파업 지지를 철회했다. 이 철회는 사용자인 DPD가 파업 강행 시 이를 지원해온 GM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되었다.³⁾

DPD는 현행법상 근로자/노무제공자가 아닌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택배기사로 구성된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승인할 수 없고, 이들의 집단적 급부제공 거부행위도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⁴⁾ GMB는 소속 택배기사 조합원에게 예정된 '단체행동'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그들의 '용역계약(service contract)'을 위반할 수 있고, 그로 인

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별적으로 민사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

한 근거로 위 단체행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⁵⁾

1) CNBC(2018.11.23), "Amazon reports 'record levels' of UK shopping as Black Friday takes off internationally", <https://www.cnbc.com/2018/11/23/amazon-reports-record-levels-of-uk-shopping-black-friday.html>.

2) Id.

3) The Guardians(2018.11.22), "Union drops support for DPD courier walkout after legal threat",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8/nov/22/gmb-union-drops-support-for-dpd-courier-walkout-after-legal-threat>.

4) Id.

5) Id.

프랑스 :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4주째 이어지자 마크롱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등 발표

2018년 11월 중순 2019년 유류세 인상안이 발표되자, 유류세 인상에 대한 반대는 물론이고 지방의 주변화, 높은 물가 및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까지 다양한 이슈를 담아 낸 시위가 11월 17일부터 4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는 분명한 시위 주도 세력이 없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은 극좌 무정부주의자부터 극우 민족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 사이에 있는 중도성향의 사람들도 많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프랑스 법에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한 노란조끼(gilet jaunes)를 입고 있어 노란조끼 시위로 불리는 이 시

위에는 처음으로 전국적인 시위가 있었던 11월 17일에 28만 2천 명이 참여한 데 이어, 11월 24일 두 번째 시위에는 16만 6천 명이, 12월 1일 세 번째 시위에는 13만 6천여 명이, 12월 9일 네 번째 시위에는 13만 6천여 명이 참여했다.

수도인 파리에서 일어난 시위의 경우 두 번째 시위는 첫 번째 시위에 비해 규모는 줄었지만 폭력과 방화가 발생했고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하였고,¹⁾ 세 번째 시위는 더욱 과격해져서 경찰 발표에 따르면 파리 시내에서 부상자는 200명 넘고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는 약 600명에 이르렀다.²⁾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마크롱 대통령은 예정된



세르비아 방문을 취소하고, 12월 3일 긴급보안회의를 개최하였다. 4일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개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을 6개월 유예하며, 겨울로 예정되어 있던 가스 및 전기세 인상도 중단하고 차량매연배출 기준 강화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격시위는 계속되었고 네 번째 시위에서는 1천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행되었으며 파리 시내의 경우 시위로 전소된 차량이 50여 대, 파손된 사업장이 10여 곳에 이르며 11월 17일 첫 시위 이후 소매업 매출에 10억 유로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시위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⁴⁾

마침내 12월 10일 마크롱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폭력에 대해서는 비난했지만 “시위대의 극심한 분노는 여러 측면에서 타당하다”면서 2019년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인상하며 저소득 연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예정된 세금인상은 철회하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며, 사용자들에게 비과세 연말 보너스를 지급할 것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부유세 재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프랑스가 약해질 것이며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면서 거부했다.⁵⁾

최저임금은 약 7% 인상되며, 이 비용은 기업보다는 정부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다. Olivier Dyssopt 장관은 이 정책들 시행에 80억~100억 유로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미세조정 과정에 있으며 예산마련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1) BBC 뉴스(2018.12.4), “France fuel protests: 'Yellow vests' pull out of PM meeting,”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6328439>
- 2) BBC 뉴스(2018.11.24), “France fuel protests: Police in Paris fire tear gas,”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6328439>
- 3) BBC 뉴스(2018.12.2), “France fuel protests: Macron holds urgent security meeting,”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6417991>
- 4) BBC 뉴스(2018.12.4), “France protests: PM Philippe suspends fuel tax rises,”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6437904>
- 5) BBC뉴스(2018.12.1), “France fuel protests: Tear gas fired in clashes in Paris,”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6411699>

프랑스 : 고령 구직자의 취업현황

2018년 7월 12일에 프랑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17년 사이에 프랑스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층(만 5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취업률이 8.2% 증가하여 2017년에는 61.5%에 이르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25~49세 사이의 대도시 거주자의 취업률은 1.9% 감소하여 2017년에는 80.6%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17년도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대도시 거주자 중 고작 29.2%만이 취업한 상태이다.¹⁾

청년층의 취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취업률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프랑스 정부가 끊임 없이 고령층 취업률 향상에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조기 퇴직을 막기 위해 각종 법률의 개정을 연이어 시도해왔다.²⁾ 나아가 프랑스 정부에서

도 고령자들의 구직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17일부터 21일 간 일드프랑스(Île-de-France) 고용상담소에서는 고령 구직자와 고용주 회사의 만남 주간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고령층의 취업률이 증가한 원인 중 다른 하나는, 그들이 재취업 후에 평균적으로 20~30% 정도 낮은 임금을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고령 구직자에게 더 호의적이며, 특히 경력이 필요한 상업과 행정업무 등에서 그들의 연륜은 빛을 발한다. 다만 그들은 개업이나 창업을 하는 것은 꺼린다.³⁾

프랑스 정부는 고령층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이들의 일자리의 안정성이 감소하는 부작용은 막지 못했다.³⁾

- 1) 프랑스 통계청(2018.7.12), "L'emploi des seniors en hausse entre 2007 et 2017: plus de temps partiel et d'emplois à durée limitée,"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3582878>
- 2) 르몽드(Le Monde) 지(2018.8.6), "L'emploi des seniors augmente, la précarité aussi," https://www.lemonde.fr/emploi/article/2018/08/06/1-emploi-des-seniors-augmente-la-precarite-aussi_5339741_1698637.html
- 3) 르파리지앵(Le Parisien) 지(2018.11.14), "Seniors en quête de job : ce qu'il faut savoir," <http://www.leparisien.fr/economie/emploi/seniors-en-quete-de-job-ce-qu-il-faut-savoir-14-11-2018-7942485.php>
- 4) 르몽드(Le Monde) 지(2018.8.6), "L'emploi des seniors augmente, la précarité aussi", https://www.lemonde.fr/emploi/article/2018/08/06/1-emploi-des-seniors-augmente-la-precarite-aussi_5339741_1698637.html



프랑스 : 마크롱 정부, 장기근로계약 유도를 위한 제도 도입 확정

2018년 11월 9일,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정규직 노동계약 체결을 장려하고 단기노동계약을 악용 내지 남용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 제도는 단기노동계약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체결하는 회사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¹⁾

2018년 9월 25일 르파리지엔(Le Parisien) 지의 노동부장관 뮈리엘 페니코(Muriel Pénicaud)와의 인터뷰 기사²⁾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에서 체결되고 있는 10개의 노동계약 중 9개가 비정규직 계약의 형태에 속한다. 이러한 계약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크고 나아가 고용보

험 지출의 40%가 비정규직의 실업급여 지급에 사용되고 있다.³⁾

이 제도의 도입은 마크롱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그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과 동시에 도입을 확정했다는 점에 그의 의의가 있다.

그의 노동철학의 핵심인 노동유연성과 대치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 그의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고 돌아선 민심을 쫓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기도 한다. 허나 여전히 노동조합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⁴⁾ 마크롱 대통령은 산업별로 나아가 각 기업별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예고 했다.⁵⁾

- 1) 르파리지엔(Le Parisien) 지(2018.11.9), “Emmanuel Macron confirme que les entreprises qui abusent des contrats courts seront taxées” 참조, <http://www.leparisien.fr/economie/emploi/emmanuel-macron-confirme-que-les-entreprises-qui-abusent-des-contrats-courts-seront-taxees-09-11-2018-7939218.php>
- 2) 르파리지엔(Le Parisien) 지(2018.9.25), “Assurance chômage : contrats courts, dégressivité... Pénicaud fixe le cap” 참조, <http://www.leparisien.fr/economie/emploi/penicaud-lutter-contre-les-contrats-courts-c-est-resoudre-une-partie-du-deficit-de-l-assurance-chomage-25-09-2018-7902669.php>
- 3) 다프마그(DAF-MAG)(2018.11.9), “Emmanuel Macron confirme la création d'un bonus-malus sur les contrats courts” 참조, <https://www.daf-mag.fr/Thematique/rh-1245/Breves/Emmanuel-Macron-confirme-creation-bonus-malus-contrats-courts-335060.htm#4BPpvsTj1J0KT1KZ.97>, <https://www.lci.fr/politique/malus-pour-les-cdd-emmanuel-macron-remet-une-piece-dans-la-machine-2104056.html>
- 4) 레제코(LesEchos) 지(2018.11.9), “Bonus-malus sur les CDD : Macron met un coup de pression sur le patronat” 참조,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social/0600118091889-bonus-malus-sur-les-cdd-macron-met-un-coup-de-pression-sur-le-patronat-2220597.php>

베트남: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대출 지원

베트남 정부는 시각장애인협회(회장 딩타인퐁, Đinh Thanh Tùng)와 관련협약을 맺고 ‘국가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금 프로그램(Chương trình vay vốn từ Quỹ quốc gia về việc làm và dạy nghề)’을 통해 시각장애인 13,0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각장애인 37,100명의 직업훈련과 교육을 위해 위 프로그램의 기금 516억 5천만 VND(약 221만 USD)을 대출 해주었고 이 중 13,000명(대부분 시각장애인이며 기타 장애인은 일부 포함)이 일자리를 갖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2017년). 또한 각 지방정부에서도 400억 VND(약 171만 USD)의 기금 추가 대출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들의 직업훈련유지와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으로 전체 장애인 빈곤율이 연간 약 1.5% 감

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각장애인협회 퐁 회장은 이 기금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집중적인 직업 훈련을 받아 일자리(주로 제조업, 마사지, 수공예, 의료기술자)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협회는 기금 상환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고 있고, 이 기금의 상환을 위해 기금을 수급받은 장애인들에게 교육을 통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기준으로 기금 미상환으로 인한 부채금액은 4,100만 VND(약 1,756달러)으로 이는 상환기금의 0.07%에 불과하여 상환율은 100%에 가깝다고 밝혔다. 다소 아쉬운 점은 기금 신청자에 비해 대출의 실행 비율이 30%에 불과해 이를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¹⁾

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기관지 ‘바오전신’(2018.11.2), <http://baodansinh.vn/hon-13000-nguoi-mu-duoc-vay-von-tao-viec-lam-d84573.html>

베트남: 퇴직·실업 수당 산정에 관한 새로운 규정 발효

베트남 정부는 2018년 10월 24일 퇴직·실업 수당의 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시행규칙(148/2018/ND-CP, 2018년 12월 15일 발효)을 발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직·실업 수당의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

위해 일한 총근로시간에서 법률에 따라 사회보험 수급을 받은 시간과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퇴직·실업급여의 수혜기간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실제 사용자를 위한 시간에는 주휴일,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 치료기간, 사회보험법에 따른 출산기간, 사용자



가 조직한 교육시간, 근로계약의 정지기간(동법 제 5조) 등이 포함된다. 이 수당의 근로기간 산정 단위는 1년(만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1~6개월의 근로기간은 1/2년으로, 7~12개월은 1년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또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 연장될 수 있지만 그 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법률(베트남 노동법 제42조 제5항,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보상금 산정도 이 시행규칙의 계산방법을 따른다.¹⁾ 이 규정은 기존 규정에 비해 수당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의 기준과 구분을 자세히 하고 법률을 위반한 일방적 근로계약의 수당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1) 노동법 시행 규칙(148/2018/ND), <https://thuvienphapluat.vn/van-ban/Lao-dong-Tien-luong/Nghi-dinh-148-2018-ND-CP-sua-doi-Nghi-dinh-05-2015-ND-CP-huong-dan-Bo-luat-Lao-dong-376235.aspx>